

6·3 대선 주자에 듣는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크게·뛰게 만들겠다”

광남일보와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릴레이인터뷰에 착수했다. 인터뷰는 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로 미리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은 뒤 후보와 일정 조율이 되는 대로 차례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다.

-대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와 희망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서 12·3 계엄으로 나라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크게, 다시 한번 뛰게 만들고 싶다. 87년 체제의 종식이 왔다. 새로운 제7 공화국을 여는 중대한 시기다. 시대에 맞는 법령과 제도를 만드는 게 개헌이다.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개헌을 통해 새로운 공화국의 비전을 보여줘야 중도층도 지지해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대선을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연대·연합·통합의 큰 틀을 짜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자치분권의 나라, 연방국가로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후보님은 생각은?
△개헌을 통해 연방 수준에 준하는 자치분권 국가로 가야 한다는 주장했다. ‘수도권 일극 중심’ 발전 전략은 산업화에는 성공했지만 시·모르지만 미래의 대한민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국가로 거듭나야
청년스마트기업지원·청년자산제 제안

다극 체제로 발전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로 거듭날 때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지방 정부가 재정·입법권을 갖는 등 권한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지방 정부에 배려해야 균형발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윈윈(win-win)이 가능하다.

-이장부터 시작해서 군수, 도지사, 장관 등을 거쳐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장 잘 알고, 균형발전과 연방국가를 갈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데.
△참여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자치분권 특별법 그리고 주민투표제를 직접 선안하고 입안했다. 누구보다도 자치 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 186개를 지방으로 이전해 혁신도시로 성공했고,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했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자치분권 정책을 가장 앞서 추진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계승자라고 생각한다. 6월 3일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고 균형 발전을 이룰 토대를 ‘제2의 노무현’처럼 쌓아야 한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지방에서는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경제가 굉장히 위기임에는 틀림 없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동반한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의 25%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는데 특히 이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굉장한 부담이다. 한미 동맹 70년에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옥동자는 대한민국이다. 새 정부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방 외교 실패로 중국과 러시아 무역이 반토막이 났다. 빠르게 복원을 해야 한다. 내수 시장도 많이 침체가 돼 있는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극복해야만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ATM(돈 찍어내는 기계)이다’라고 했을 때 여야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아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라고 말했는데.
△지난 미국 대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리스 후보가 우세할 거라고 예측했지만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의심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후보 시절에 서한문도 두 차례나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적으로 통상이나 외교 정책을 펴는 것 같지만 분명한 노선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 정부에서 얼마든지 미국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불리한 여건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말로 예측 가능한 대통령이다. 특히 우리 한국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매우 중요한데 북한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채널이 있다. 어쨌든 원산 갈마지구 대규모 복합 리조트 단지에 관심도 있고, 잘 되면 평양과 위성탄의 연락사무소가 격상돼 북미 수교 또 북일 수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확실하게 정착돼 우리의 미래가 훨씬 더 열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미래와 청년이다. 경제를 살리면서 청년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은?
△대한민국이 ‘창업보급’으로 가야 한다. 청년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부가 재원을 확보해 청년 스타트업 기업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 해 30만명 가량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정부가 2000만원 정도를 신장하고 그 신장된 2000만원을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공공 운영사를 만들어 잘 운영해서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5000만원 정도로 불러주는 ‘청년 자산제’를 제안했다. 김대중 정부가 많은 벤처 기업을 지원해 지금 우리가 정보 강국이 됐지 않나. 그런 걸 벤처마케팅해서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생각이다.
-김두관 하면 “□ 대통령”이다. 키워드는?
△김두관은 ‘돈돈한’, 불안한 시대의 돈돈한 대통령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정치 불안, 경제 불안, 미래 불안인데, 이 불안한 시대를 돈돈한 김두관이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대형산불, 재정당국 책임져야”
서삼석, 산림보호정책 개선 요구

국회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남·무안·신안)은 지난 10일 농축수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산불 관련 현안보고’에서 산불 대응과 산림 보호·활성화 정책에 대한 재정 당국의 의지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최악의 재난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화된 진화 장비와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며 “산불 감시 CCTV는 10년째 신규설치 없는 제자리걸음으로 전체 산림의 25%만 관리되고 있으며, 2027년 2500명까지 확대 계획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 또한 행안부나 기재부에 증원 요청도 없이 2019년부터 435명으로 유지되고 있어 국가 산불 대응 역량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된 산불진화 증액안이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18건 중 5건이 반영된 것과는 달리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19건 중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정 당국의 ‘칼’질인지 주무 부처의 노력 미흡인지 모르겠지만, 일차적으로 산불에 대해 국회 증액안을 반영한 재정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서
전남도 등 16곳 ‘우수’ 판정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첫해인 2024년도 실행계획을 평가한 결과 중앙행정기관 9곳과 광역지방자치단체 7곳 등 총 16곳이 ‘우수’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31곳과 광역자치지 17곳의 실행계획 이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수’, ‘정상 추진’, ‘미흡·개선 필요’ 등 3단계로 판정했다.
‘우수’ 판정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방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법원도서관, 헌법재판소도서관 등 9곳이다.
광역자치체는 전남도를 비롯해 대구시와 경남도, 서울시, 충남도, 세종시, 제주도 등 7곳이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 수사 촉구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향의 방문하며 신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도, 지역발전 대선 공약과제 건의 쟁결음

국회 방문...지역 국회의원·각 정당 관계자 대상 건의활동
국립의대·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AI 슈퍼클러스터 등

전남도는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을 찾아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관계자 등에게 대선공약 건의 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0~11일 이틀간 전남지역 국회의원, 지역 출신·연고 의원, 각 정당 관계자를 잇따라 방문해 지난 8일 공식 발표한 전남 미래발전 정책과제 75건을 설명하고 대선공약에 반영되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전남도가 지역 미래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대선공약에 반영시킬 핵심과제는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조선·해양 AI 초격차 자율제조 특구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에너지 신도시 조성 등 20건이다.
지역 현안과 연계한 분야별 지역발전과제 35건, 국가 차원의 국정과제로 전국

화할 필요가 있는 제도 개선 국정제안 과제 20건도 함께 건의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연구원,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전남 미래발전 중대형 프로젝트’ 과제 발굴에 주력했다. 최근 대통령 탄핵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조기 대선 전남지역 공약으로 발빠르게 전환해 발표했다.
도는 앞으로 국회의원, 각 정당 전남도당, 경선 후보자 캠프, 지역 정치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약과제를 지속해서 건의하고, 대선공약에 최종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정형 기자 holbu@

전남도, 공직사회 신뢰·중립의무 강화
대선 관련 법령·주요사례 등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전남도는 오는 6월 3일 예정인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선거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도청에서 도·시·군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은 류문영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강의를 맡아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관계법, 주요 제한·금지사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심재명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한 선거의 핵심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하고 깨끗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대통령 선거일까지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법 교육과 선거 관여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5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실시하며, 본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박정형 기자 holbu@gwangnam.co.kr

“광주, 대한민국 이끄는 글로벌 혁신도시”
안도걸, 만민공동회 출범식서 4대 전략·미래 비전 제시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사천)은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포럼 만민공동회 출범식’에 참석해 ‘광주의 미래비전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광주는 AI와 에너지, 문화, 바이오, 모빌리티 등 다양한 혁신 역량을 보유한 도시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결집시킨다면 광주는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며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광주를 글로벌 AI 에너지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초기대 AI 집적클러스터 조성, 분산에너지 기반 전력망 구축, 태양광·풍력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략으로 전남대·조선대·가톨릭대·화순백신·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초고자기장 연구·산업·인프라를 구축을 제시



했다.
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3.0의 완성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글로벌 창작·공연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역사박물관·국회도서관 분원 유지를 추진하며, ACC·양림동·무등산을 잇는 글로벌 문화관광타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전략으로 서해안 KTX 및 새만금-무안 철도 등 초광역 교통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기반 AI 클러스터(메가샌드박스) 구축, 민·군 통합공항 이전과 서남권 국제관문 공항 조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광주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며 “‘만민공동회’가 민주의 심장 광주에서 새로운 산단 연계 집적형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초고자기장 연구·산업·인프라를 구축을 제시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양시의회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절실”
전남시군의장협의회서 의결...“국가가 책임져야”

광양시의회는 최대원 의장이 제안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결의안’이 최근 전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장은 결의안에서 “이순신대교는 국가·광양국가산단의 물류를 원활히 수송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개통돼 석유화학과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일일 평균 2만여대의 차량이 이용되고 있고 전·출입도로의 끊임없는 파손으로 보수·정비가 이뤄지고 있는데 매년 수조원의 국세를 징수하면서 도로유지관리 부담금은 재정에서 열악한 지자체가 전액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는 전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를 분담하고 있고 첫째 12억원이던 유지관리비가 올해는 80억원으로 급증

하는 상황으로 지자체 재정 여력으로 계속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산단 운영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 오고 있는 지자체에 산단 전·출입도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재정을 과도하게 재정을 부담시키는 행위로 ‘지방자치법’ 제11조 사무 배분의 기본원칙에도 크게 어긋난 행태”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국도 승격을 촉구했다.
최 의장은 “정부는 국가산단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월내로 즉시 연장하고 이순신대교와 국가산단 전·출입도로 유리 관리 책임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